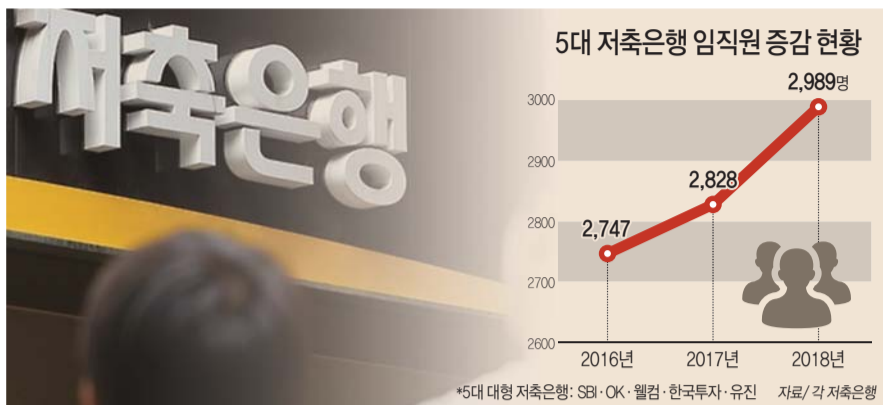


디지털시대, 되레 몸집 저축하는 저축銀 “신사업 발굴”

수익 증가 등 지속적 성장세에 작년 대형 저축은행 직원 늘어 유진저축은행 전년비 17.3% ↑ ‘인력 감축’ 시중은행권과 대조



1062명으로 같은 기간 10% 증가했다.

이어 유진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임직원 수는 지난해 각각 311명, 340명으로 2017년보다 각각 17.3%, 4.6% 증가했다. 2017년 대비 지난해 임직원 수가 2% 줄어든 웰컴저축은행을 제외한 4개 대형 저축은행의 임직원 수가 늘어난 것.

이는 2017년과 비교해 지난해 임직원 수가 줄어든 시중은행과 다른 모습이 다.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신한·우

리·하나은행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2017년 총 4만5820명에서 지난해 4만5295명으로 525명이 줄었다.

저축은행이 채용인원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것은 비대면 사업 역량을 제고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기본적인 예금·대출 영업 수준을 벗어나 휴대폰을 통한 디지털 금융과 같은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저축은행에게 새로운 사업을 추

진할 활로가 뚫렸다고 볼 수 있다”며 “시중은행으로서는 기존 영업점을 줄이고 남은 인력을 디지털 사업 분야로 돌릴 수 있어 임직원 수를 더 늘릴 필요가 없으나 저축은행은 처음부터 영업 지점이 적었기 때문에 신사업을 추진할 추가적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자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고 이를 통해 추후 또 다른 사업 영역을 개척할 수도 있는 점에서 저축은행의 인력 확충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9일 발표한 저축은행의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69조5000억원으로 2017년 말 59조7000억원에 비해 9조8000억원(16.4%)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각각 대출금·현금·예치금·보유 유가증권 등의 액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저축은행 업계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함에 따라 저축은행의 인력 확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2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 때 대대적인 인력 감축이 있었다”면서 “현재는 저축은행 업권이 다시금 성장하는 과정으로, 업권이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력을 충원하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확장하는 등 소매 금융의 비중도 늘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저축은행이 금융기관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선 금융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크기가 돼야 한다”면서 “저축은행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성장하지 않았고, 앞으로 저축은행 업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를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어 저축은행의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홍민영기자 hong93@metroseoul.co.kr

‘우리 삼성페이 통장·카드’ 가입하면 캐시백 “규제 샌드박스 통해 수익 창출 유도”

우리은행 신규가입 이벤트

우리은행은 삼성 페이(Samsung Pay)를 이용해 은행 방문없이 개설 가능한 ‘우리 삼성페이 통장·체크카드 신규가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우리은행 거래가 없던 고객도 영업점 방문없이 삼성페이를 통해 통장을 실시간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우리 체크카드 발급신청도 가능하다. 발급 가능한 통장은 우리 꿈

통장이며, 체크카드는 카드의 정식 포인트·쏘삼·쿠키 등 3종이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12일까지 서비스 출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삼성페이를 통해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발급신청을 한 고객에게 5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삼성 페이에 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이벤트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결제(누적 2만원 이상)를 완료한 고객에게 5000원을 추가 제공한다. /홍민영 기자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일문일답

데이터3법 통과 노력... 입법 가능성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9일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에 집중된 마케팅비용은 줄이되 신사업발굴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데이터 3법 개정전이라도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국장과의 일문일답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비율)에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자산과 중금리대출을 제외한다고 했다. 이 경우 대출 증가로 부실률이 높아질 우려는 없다.

“지난해 중금리 대출 발전방향을 발표하면서 업종에 따라 중금리대출 금리를 다원화했다. 카드사 중금리대출은 연 11%정도다. 이 금리 수준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이라면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경쟁력 및 건전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우리카드 레버리지비율은 6.0%였다. 신사업 관련자산과 중금리대출을 제외하면 1%정도 낮아질 수 있다. 신사업 발굴에 쏟을 수 있는 금액을 900억정도로 늘릴 수 있는 수준이다. 국민 신한 삼성 카드의 경우도 500억~800억정도 늘릴 수 있다. 신사업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카드사들이 수익성을 다변화하기 위해선 우선 데이터 3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국회통과가 돼야 하는 부분이다. 법안 통과부터 신사업 발굴 등 카드사들이 경쟁력을 갖기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대책이 있다.

“현재 데이터3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특히 신용정보법의 경우 상당부분 설명이 이뤄진 상태여서 입법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 법 개정전이라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으로 판단할 수 있다. 레버리지비율에 포함되지 않아도 안전한 수준이다.”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비율)에 빅데이터 신사업관련자산과 중금리대출을 제외한다고 했다. 이 경우 수치는 얼마나 낮아지나. 또 카드사가 볼 수 있는 수익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DGB대구은행 ‘My스마트통장’ 이체 무제한 무료

DGB대구은행이 조건없이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마이(My)스마트통장을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My스마트통장은 DGB대구은행 최초 비대면 전용 입출금통장이다. 은행 지점을 찾지 않아도 되며, 거래실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수수료 면제 서비스가

제공된다.

My스마트통장은 스마트뱅킹을 통해 개인(1인 1계좌) 고객이 가입 할 수 있으며, 타행이체수수료(무제한), 전자금융수수료(월30회), ATM기현금인출수수료(월 통합10회)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유리 기자

KB국민銀 ‘가업 자문 로얄 골드서비스’

WM고객 대상 토털 자문서비스



KB국민은행은 9일 자산관리(WM) 고객의 종합적인 자산승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KB 가업(家UP)자문 로얄 골드(Royal Gold)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개인 및 법인(최고경영자 포함) WM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유산정리, 가업승계, 기업매각 등 종합적인 자산승계 관련 이슈에 대해 분야별 전담 전문가들이 컨설팅 및 솔루션을 제시하는 KB만의 종합 자문서비스다. 서비스 전담팀은 KB국민은행, KB중

권 등 KB금융그룹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세무사, 회계사로 구성된 세무·회계팀을 비롯해 법률 문제를 담당하게 될 전담변호사, 상품·포트폴리오 분야의 투자전문가, 기업매각·인수합병(M&A) 전문가 등이다. /양상미 기자 smahn1@

해외, 상속세 부담 줄어 승계 원활... 장수기업으로 경쟁력 ↑

>> 1면 ‘상속세에 발목잡힌’서 계속

반면 해외 기업들은 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해 100년이 넘는 장수 기업으로 성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해외 대기업의 승계 사례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포드, 헨켈, 하이네켈 등 100년 이상 해외 장수 대기업은 몇 세대에 걸친 승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창업주 가족의 경영 지배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상속공제 1조기업으로 확대

재계가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상속세나 증여세다.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OECD 국

가 중 상속소득세 최고세율 합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상속세율이 최고 55%, 소득세율은 최고 45%이다. 하지만 기업 승계 국면에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주주 경영권 승계에 대해 할증이 최고 30%까지 붙어 상속세율이 최고 65%로 뛰기 때문이다. 이 경우 두 세대의 최고세율 합은 107에 달해 일본을 넘어선다.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매출 1조원(한국경제연구원 분석)으로 확대하면 매출이 52조원 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행

(3000억원 미만)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유지할 때와 비교해 매출은 6.8%, 고용은 3.0% 각각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들 기업을 업종별로 분류하면 제조업이 72%(56개)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제조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핵심기술 축적과 생산 노하우 전수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특성상 영속성이 필요하므로 가업상속 효과가 크다는 게 환경연의 설명이다. 경제정책팀 홍성일 팀장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성장을 위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 개인이 상속세 재원을 따로 마련해 두기가 어렵고, 상속받은 주식의 현금화도 어렵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김민호 정치경제 부장 kmh@